

# 대북 경수로지원사업과 남북한 관계

1997. 9

전 성 훈  
(안보정책연구실 연구위원)

- 이 報告書는 民族統一研究院의 研究計劃에 依據한 自體 研究 結果임.
- 收錄된 內容은 統一問題研究 및 政策開發의 參考資料로 提供되는 것으로 刊行處의 意見을 받드시 反映하는 것 은 아님.

民族統一研究院 安保政策研究室

- 목 차 -

I . 문제제기 .....	1
II . 경수로사업의 추진 현황과 전망 .....	2
1. 현황 .....	2
2. 전망 .....	3
III . 경수로사업의 의미와 영향 .....	6
1. 남한 .....	6
2. 북한 .....	9
3. 주변국의 대북 접근 측면 .....	12
IV . 한국의 고려사항 .....	14
1. 주요 고려사항 .....	14
2. 전략적 차원의 대책: 연계전략의 활용 .....	17

## I. 문제제기

- 북미 기본합의문('94.10.21, 제네바)의 핵심 요소인 대북 경수로지원사업은 주요 현안에 대한 관련국들의 입장차이와 돌발사태의 발생으로 우여곡절을 겪으며 진행되고 있음.
  - 공급협정이 한국형경수로의 제공과 한국의 중심적 역할 보장에 대한 이견으로 예정보다 8개월이나 지연된 끝에 체결('95.12.15, 뉴욕)되었으며,
  - 북한의 잠수함 침투사건이 발생('96.9.18)하여 4개월간 후속의정서 협상이 중단된 바 있음.
  
- 최근 함경남도 신포지역에서 경수로건설을 위한 부지준비공사가 착공('97.8.19)됨으로써, 대북 경수로지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됨.
  
- 본 보고서에서는 기본합의문 타결후 2년 10개월, 경수로 공급협정 체결후 1년 8개월만에 성사된 부지준비공사의 착공을 계기로,
  - 경수로사업의 추진과정을 검토·예측하고 동 사업이 갖는 의미와 영향을 분석함과 동시에 한국의 고려사항과 대책을 제시하고자 함.

## Ⅱ. 경수로사업의 추진 현황과 전망

### 1. 현황

- 기본합의문에 의거하여 시작('94.11.30, 북경)된 일련의 경수로 전문가회담은 북한이 한국형경수로와 한국의 중심적 역할을 거부함으로써, 공급협정 체결의 목표시한('95.4.21)을 넘기며 결실을 맺지 못함.
- 준고위급회담('95.5.19~6.12, 쿠알라룸푸르)에서 협상의 돌파구가 마련된 이후, KEDO와 북한은 1995년 9월부터 진행된 협상을 통해 공급협정에 서명('95.12.15)함.
  - 공급협정은 경수로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기본틀로서 18개조와 4개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고, 13개의 세부 후속의정서가 별도로 체결되어야 함.
- KEDO와 북한은 1996년 4월부터 후속의정서에 대한 협상을 시작하여 경수로사업의 기반이 되는 여섯가지 후속의정서에 합의함.1)

---

1) ①「KEDO의 법적 지위와 특권·면제 및 영사보호에 관한 의정서」, ②「KEDO와 북한간의 통신의정서」, ③「KEDO와 북한간의 통행의정서」, ④「노무·물자·시설 및 기타 서비스에 관한 의정서」, ⑤「부지의 인수·접근 및 사용에 관한 의정서」, ⑥「채무불이행시 조치에 관한 의정서」 등임.

- 이와 함께 KEDO와 북한은 금년에 진행된 구체적인 실무협상에서 시행세칙에 해당하는 19개의 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써 경수로 착공을 위한 법적·제도적 준비를 완료함.
- 1997년 7월 28일 금호지역에 KEDO 사무소가 설치되었고, 8월 4일 경수로 건설현장과 한전본사를 연결하는 직통전화기 설치되었으며, 남북한 우편물 교류업무도 7월 24일부터 시작됨.
- 마침내 북한과 KEDO의 관계자들과 기술진이 참석한 가운데 신포 현지에서 부지준비공사 착공식이 거행('97.8.19)됨.

## 2. 전망

- 경수로사업은 추진속도의 완급은 있을 지언정 사업 자체가 폐기되는 파국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.
  - 동 사업이 북한의 핵개발 동결을 위한 관건이라는 데 한·미·일 3국의 견해가 일치하고 있고, 북한 역시 사업에 매우 적극적임.
- 그러나 경수로사업은 그 추진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됨.
  - 무엇보다도 경수로사업은 남북한 관계에 많은 영향을 받을 것

이며,

- 기본합의문상의 다른 현안들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을 뿐아  
나라,
- 한·미·일 3국간에 합의해야 할 민감한 사안들이 산적해 있기  
때문임.

○ 주요 예상문제점으로는 기술자문사(Technical Support Consultant: TSC)의 위상과 역할, 경수로 건설비용 분담 및 사업배분 문제, 한국의 경수로비용 확보 문제, 원자로안전성에 대한 북한의 이의 제기, 인도일정 지연에 따른 문제 및 북한의 IAEA 특별사찰 거부 등을 들 수 있음.

○ 특히 이번의 착공식은 본공사를 준비하기 위한 부지정지작업이  
며 원자로건설이 시작되기까지 적어도 1년의 시간이 더 필요함.

- 본공사를 위해서는 부지준비공사 완료, KEDO와 한전간의 상  
업계약 체결, 한·미·일 3국간의 비용분담 합의, 북한의 본공사  
착수승인 등의 절차가 진행되어야 함.

- 앞으로 체결해야 할 7개의 후속의정서도 경수로의 안전과  
인도일정 등에 관한 민감한 사안들이기 때문에 협상과정에서  
난항이 예상됨.

○ 기본합의문은 북미 양국이 고도의 연계전략(cross-issue linkage

strategy)을 구사한 결과로서 북한의 핵개발 포기과 대북지원에 관한 양측의 의무사항들이 “씨줄과 날줄” 식으로 밀접히 연계되어 있는 바,

- 어느 일방이 기본합의문상의 특정 부분이 실천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다른 부분의 이행을 거부할 경우 기본합의문의 전체적인 이행을 중단될 수밖에 없음.
  
- 한편 기본합의문과 관련되지 않은 사안들이 기본합의문 이행과 연계될 수도 있는 데, 북한의 잠수함 침투사건으로 인한 경수로사업 지연이 대표적 사례임.
  
- 아울러 경수로건설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.
  - 경수로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수많은 남한 인력과 장비가 드나 들고 남북한 인력이 함께 작업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돌발적인 사태가 발생하여 사업에 장애를 조성할 가능성이 있음.

### Ⅲ. 경수로사업의 의미와 영향

- 남북관계가 단절되어 있고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경수로사업이 갖는 의미와 영향을 남북한 각각의 입장과 주변국의 대북 접근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음.

#### 1. 남한

##### 가. 긍정적 측면

- 부지준비공사 착공을 계기로 경수로사업이 협상단계에서 구체적 사업추진단계로 진입함에 따라 그 동안 미국 중심으로 추진되어 온 사업이 주계약자를 관할하는 한국 주도로 국면전환됨.
  - 한전이나 남한의 시공업체들과 북한 당국이 실무적인 문제들을 직접 해결하는 차원으로 전환됨.
- 상당수의 남한 인력과 장비가 투입될 경수로사업은 분단 이후 남북한의 주민들이 가장 광범위하게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바,<sup>2)</sup>
  - 남북한 주민간의 동질성 회복 및 신뢰증진에 기여할 수 있음.

---

2) 오는 2004년까지 경수로 2기를 완성하는 것을 상정할 경우, 연인원 1천만 명이 참여하게 되며 공사가 본격화되면 하루에 최대 7천명까지 동원될 것으로 예상된다.

- 아울러 북한의 관료와 전문인력 및 건설종사자 등 다양한 계층의 북한 사람들에게 남한의 경제력, 사회제도, 사고방식 등을 자연스럽게 전파함으로써 남한 체제의 우월성을 교육·홍보할 수 있음.
- 경수로사업은 정치적 색채를 띄지 않는 과학·기술분야에서 먼저 남북협력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남북화해와 민족의 공동발전 및 평화통일의 초석이 될 것임.
  - 구체적으로, 경수로사업은 심각한 에너지난을 겪고 있는 북한에 원자력발전소를 지원함으로써 전력난 해소와 함께 남북간 에너지교류의 시초가 될 수 있음.<sup>3)</sup>
- 경수로사업을 통해 북한 원자력 기술자들과의 접촉을 강화하여 인적정보를 축적함으로써 북한의 원자력 기술실태를 보다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음.
  - 북한의 과거 핵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은 아직도 북한 핵의 불모가 되어 있고,
  - 북한의 핵능력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미국이나 러시아, 중국 등과의 정보교환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,

---

3) 현재 북한의 최대 전력생산능력은 700만KW이며 실제가동률은 400만KW임. 따라서 200만KW용량의 경수로 2기는 현재 북한의 전력생산량의 50%에 해당됨.

- 경수로사업은 북한의 핵활동에 관한 정보를 독자적으로 수집하는 계기로 활용될 수 있음.
- 경수로협상과정에서 향후 남북교류를 위한 구체적 제도를 마련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는 많은 자료가 생산됨.
  - 출입국, 통신·통행, 통관, 의료자원, 은행 및 보험 등에 대한 합의사항들은 앞으로 본격적인 남북교류에 대비한 제도정비에 크게 기여할 것임.

#### 나. 부정적 측면

- 경수로사업 진행과정에서 어느 일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동 사업과 관련되지 않은 사안을 연계함으로써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남북관계 전반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음.
  - 전자의 예로서, 북한이 경수로의 핵심부품이 인도되는 시점에서 받기로 되어 있는 IAEA의 특별사찰을 거부할 경우 경수로사업이 전면 중단될 수밖에 없을 것임.
  - 후자의 예로서, 북한의 잠수함 침투사건이 경수로사업과 연계됨으로써 사업이 중단된 것은 물론 남북관계가 더욱 경색되었고 한-미간에도 갈등이 발생하였음.
- 잠수함 침투 사건에 따른 경수로협상의 연기는 남북한간의 정치·

군사적 사안과 경수로사업을 직접적으로 연계하는 선례가 되었던 바,

- 향후 경수로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양측에 의해 유사한 연계전략이 구사됨으로써 사업이 지연되는 상황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음.

- 경수로사업 종료 후 북한이 공사완료시한 지연이나 경수로의 안정성 등 사업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이유로 공사대금 지불을 거부하거나 핵시설 해체를 중단할 경우, 우리 정부가 매우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될 것임.

## 2. 북한

### 가. 긍정적 측면

- 경수로사업은 정치적, 재정적, 법적, 시간적 문제를 망라하는 복잡한 사업으로서 긴밀한 우호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국가간에 추진되는 사업이므로,
  - 북한이 미·일 등 서방세계로부터 확실한 체제보장과 충분한 경제적 지원을 획득하는 발판이 될 수 있음.
- 미국이 경수로의 핵심부품을 조달할 경우, 경수로사업은 북·미

관계정상화의 지름길임과 동시에 제도적 보장장치가 될 것임.

- 미국이 핵심부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미원자력법에 의거하여 양국간 원자력협력협정이 필요하며 미국은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인정한 국가와만 동 협정을 체결하였음.

○ 경수로사업은 북한과 사업에 참여하는 미국, 일본 등 서방국가들 사이의 관계개선을 기정사실화 및 촉진하는 제도적 장치로서의 의미를 가짐과 동시에,

- 사업추진 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참여국들의 경제협력과 투자 강화를 기대할 수 있음.

○ 또한 경수로건설이라는 제한된 분야를 사실상 서방측에 전면 개방하고 대규모 남한 인력의 장기간 상주를 허용함으로써,

- 북한은 서방 및 남한과의 대규모 경제협력의 성공적 추진 가능성을 타진함과 동시에 신포지역을 체제적응의 실험장으로 활용함.
- 경수로사업이 성공할 경우, 북한 체제의 대서방 적응능력이 제고됨으로써, 북한 정권은 자신감을 가지고 보다 광범위한 개방정책을 추진할 것임.

○ 경수로사업에 참여하는 북한 근로자들의 최소임금이 110달러로 책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노동력이 대거 투입됨에 따라 북

한의 당면한 외화부족과 심각한 경제난 해소에 기여할 것임.

## 나. 부정적 측면

- 경수로사업은 사업에 참여하는 북한 관리와 주민들이 남한 체제의 우월성과 북한 체제의 후진성을 깨우치고 이를 북한 전역에 전파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바,
  - 지도부와 체제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비판의식을 강화함과 동시에
  - 하층부에서의 내부소요 발생시 이를 유지·강화하는 원동력을 제공할 수 있음.
  
- 경수로사업을 통해 북한과 서방세계와의 관계가 긴밀해지는 데 비례해서 서방의 대북한 통제능력이 강화됨으로써,
  - 북한의 합의사항 위반행위로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가하는 경우 통제수단이 빈약했던 과거와 달리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.
  
- 북한의 대서방 관계개선에 따른 상황적 변화는 북한이 남북관계에서도 국제사회의 상식과 규범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압력이 될 것임.
  - 또한 “벼랑끝 전략”에 의거한 파행적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규

제하는 억제력으로 작용할 것임.

### 3. 주변국의 대북 접근 측면

- 주변국의 대북 접근 측면에서 경수로사업이 갖는 의의는 사업의 기반이 되는 「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」(Korean Peninsula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: KEDO)를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.
- KEDO는 한국전쟁 이후 주요 관련국들이 한반도 문제를 공식적으로 또한 집중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최초의 다자간 협의체로서,
  - 한·미·일 3국이 북한 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심도있게 그리고 빈번히 정책을 조율하는 기회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음.
  - 대북 식량지원 등 다른 사안에 KEDO식 접근법을 적용하려는 시도가 있다는 사실은 KEDO의 효과를 입증하는 사례임.
- 한편, 남북관계가 냉각된 상태에서 KEDO는 한국의 중요한 대북 접촉창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.
  - KEDO는 남북한 사이의 갈등을 완화하는 완충역할을 하면서 한국이 경수로사업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반임.
  - 따라서 KEDO를 통한 경수로사업은 남북관계 개선을 촉진할

수 있는 중요한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.

- 아울러 KEDO는 상호접촉의 구도를 경쟁적 관계에서 공동이익의 존재를 인식하고 실현하는 구도로 바꿈으로써 관련국들간의 다양한 협력가능성을 증대시킴.
- KEDO가 추진하는 사업에 관련된 문제들 뿐만아니라 양자간 및 다자간의 기타 사안들에 대해서도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짐으로써, 북한과 미, 일 등 서방국들간의 관계개선이 촉진될 것임.

## IV. 한국의 고려사항

### 1. 주요 고려사항

- 〈북미 원자력협력협정 체결 가능성〉: 미국이 제작한 경수로 핵심부품이 공급될 경우, 북미 원자력협력협정의 체결과 협정에 대한 미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바, 북미는 이를 계기로 양국관계를 급진전시킬 가능성이 있음.
  - 특히 미국은 경수로사업의 원활한 진행이 한·미 양국의 공동이익이 되므로 북미 원자력협력협정 체결과 이에 상응하는 양국관계의 진전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이용하여,
  - 자국산 핵심부품 공급을 통한 경제적 실리를 확보하면서 북미 관계정상화를 대내외적으로 합리화하려 할 것임.
  
- 〈KEDO식 접근법의 광범위한 적용〉: 미·일 등이 북한과 관련된 다른 분야에서도 KEDO식 접근법을 적용함으로써 국익 확보차원에서 한반도문제에 대한 제도적 개입을 강화하려 할 가능성이 있음.
  - 이러한 움직임은 남북대화가 단절된 현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으나, 장기적으로 남북한의 자주적인 문제해결 노력에 장애를 조성하고 분단을 고착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.

- <경수로사업과 정치·군사적 사안의 분리>: 남북한의 정치·군사적 사안과 분리하여 경제·과학·기술분야의 협력차원에서 경수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.
  - 북한이 한국의 중심적 역할을 부담없이 수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도 경수로사업은 정치적인 문제에 관계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점을 북한 당국에게 확신시키는 것이 필요함.
  - 특히 경수로사업은 한국이 주도하더라도 KEDO를 통해 미·일 등 국제사회와 긴밀히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남북관계로 인해 사업에 차질을 빚는 경우 다른 KEDO 참가국들과 마찰이 야기될 수 있음.
  
- <북한 주민 접촉시 행동지침 교육>: 경수로사업을 계기로 북한 주민들이 남한에 대한 경계심을 강화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.
  - 우리 기술진과 근로자들에 대해 남북한의 관습과 사고방식의 차이 등에 대한 사전교육을 철저히 함으로써, 우리측의 실수로 인해 북한 주민들이 남한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갖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.
  
- <민간차원의 대북경협 지연 명분 상실>: 경수로 부지준비공사의 착공으로 남북한간에 대규모 경제협력이 현실화 되었는데, 앞으로 우리 정부가 민간차원의 대북협력과 남북교류를 미룰 수

있는 명분이 없어짐.

- 경수로사업이 KEDO의 틀내에서 진행되는 사업이므로 민간 차원의 남북교류와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논리는 국민을 설득하기에 충분하지 못함.

○ <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의 가동>: 현재 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이 담당하고 있는 소관업무를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(이하, 핵통위)로 이관하는 문제를 신중히 고려함.

- 이는 경수로사업이 사실상 남북한의 교류·협력 차원에서 진행되는 사업이라는 점과 기존의 남북한 합의사항이 유효하다는 사실을 국내외에 부각시킬 수 있는 조치임.
- 북측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여 핵통위에서 경수로사업 추진 관련 제반사항을 논의하도록 유도함.

○ <남북한 상호협력의 필요성 증대>: 최소한 7~8년이 소요될 경수로사업은 남북대화과 긴밀히 연계되어 추진될 수밖에 없는 바,

- 남북한은 대결을 지양하고 민족의 공동번영을 이룩할 수 있는 생산적인 정책을 펴는 데 각별히 노력해야 함.
- 양측이 자주적이고 상호협력적인 자세를 갖는 데 충실했다면 경수로사업은 이미 수 년전에 시작될 수 있었던 사업임.

## 2. 전략적 차원의 대책: 연계전략의 활용

- 남북한이 상대방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때 대부분 전제조건을 제시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, 지금까지의 남북대화 전략이 사실상 연계전략의 일환이었음.
  - 이는 연계전략이 쌍방간의 신뢰가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략의 구사에 따른 위험도가 적음으로써 가장 쉽게 구사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기 때문임.

### 가. 연계전략 구사의 문제점과 대책

- 남북한이 그동안 구사해 온 연계전략은 관계개선에 기여하기 보다는 부정적인 결과를 도출한 경우가 더 많았는 바,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음.
  - ①남북한간에 협력이 도출될 수 있는 관계의 미성숙, ②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양측의 인식 부재, ③연계전략의 장단점에 대한 연구의 미비, ④연계전략을 구사해야 할 시기 선택의 문제점, ⑤연계전략에 이용되는 대상 선택의 문제점.
- 더욱이 전략적 차원에서 구체적인 실리획득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정치적 명분을 우선시하는 가운데 무리한 연계전략을 구사함으로써 실패를 자초한 측면이 없지 않음.

- 한국은 연계전략의 구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해야 할 것임.
  - 첫째, 연계전략의 효과를 너무 과대평가해서는 않됨.
  - 둘째, 연계전략이 효과적인 정책 개발에 실패했을 경우의 차선책으로 혹은 남북대화에 장애를 조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해야 함.
  - 셋째, 연계전략에 대한 북한의 반응과 역연계전략의 사용가능성 등이 치밀하게 사전검토되어야 함.
  - 넷째,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는 상황에서의 연계전략은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기 보다는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가능성이 큼.
  - 다섯째, 다양한 연계전략이 상황에 따라서 적절히 융통성있게 구사되어야 함.
  - 여섯째, 연계전략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행위를 조건으로 제시하는 보상약속이나 위협이 신뢰성을 지녀야 함.

#### 나. KEDO에서 한국의 연계전략 활용 방안

- 제네바 기본합의문은 고도의 연계전략의 산물인 바, 기본합의문에 합의된 사항들에 대해서 KEDO 참여국들이 연계전략을 구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.
  - 한국은 기본합의문의 서명자가 아니지만 KEDO의 집행이사

국으로서 경수로사업의 중심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연계전략을 구사할 수 있음.

- 경수로사업을 북한 핵문제 해결 뿐만아니라 실질적인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한국은 연계전략이 필요함.
  - 다만 정치·군사적 사안과의 연계는 사업의 중단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바, 연계의 대상을 사업중단의 위험이 적은 경제·과학기술적 분야에 국한함.
  
- 한국은 KEDO라는 다자협약체에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식으로 연계전략을 구사할 수 있음.<sup>4)</sup>
  
- 첫째, KEDO의 사업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KEDO와 연관이 없는 문제를 이용할 수 있음.
  - 예를 들어, 한·일 무역역조 시정차원에서 일본이 경수로비용의 많은 부분(30% 이상)을 부담하도록 요청하거나,
  - 식량지원을 대가로 북한이 경수로사업 진행과정에서 남북한 관계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조치들(예: 북한 원자력기술자들

---

4) 다자협약체 구성원들이 연계전략을 구사한 사례로서 유럽경제공동체(EEC) 회원국들이 포크랜드 전쟁에서의 협조를 요청하는 영국을 상대로 연계전략을 구사하여 EEC의 현안문제에 대한 영국의 양보를 이끌어 낸 것을 들 수 있음. 즉 EEC 회원국들은 EEC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EC 외부의 문제를 연계하였음. Lisa Martin, "Institutions and cooperation: sanctions during the Falkland islands conflict," *International Security* (Spring 1992), pp. 164~171 참조.

에 대한 한국내 훈련 실시)을 수용하도록 요구함.

- 둘째, 경수로사업에 대한 막대한 재정적 기여로 입지를 강화한 우리 정부는 KEDO와 관련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KEDO의 주요 문제를 연계할 수 있음.
  - 예를 들어 대북 경수로사업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대가로 한국의 원자력발전소 해외 수출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획득하는 연계전략을 구사함.
  
- 결과적으로 한국은 KEDO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부의 사안을 연계하고, 역으로 KEDO 외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부의 사안을 연계하는 양면적 연계전략을 구사할 수 있음.

## 最近 發刊資料 案內

### ■ 연구보고서

96-01	김정일의 당권장악과정 연구	최진욱	著	6,000원
96-02	통일과정에서 매스미디어의 역할	이우영	著	6,000원
96-03	동·서독 인적교류 실태 연구	김학성	著	6,500원
96-04	동서독간 정치통합 연구	황병덕	著	6,000원
96-05	남북한 환경분야 교류·협력 방안 연구: 다자적·양자적 접근	손기웅	著	7,000원
96-06	북한과 주변4국의 군사관계	鄭永泰	著	6,000원
96-07	韓·美 安保協力 增進方案 研究	金國新	著	4,000원
96-08	東北亞 平和體制 造成方案	余仁坤 金永禧의共著 申相振		10,000원
96-09	北韓 經濟改革의 最適方向 研究	吳承烈	著	6,500원
96-10	통일과정에서 민간단체의 역할	조민	著	5,000원
96-12	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의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	박영호	著	5,000원

96-13	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	제성호	著	5,500원
96-14	북한 사회의 계급갈등 연구	서재진	著	7,500원
96-15	통일과정에서의 정당역할 연구	김도태	著	4,500원
96-16	KEDO체제하에서 남북한 협력증진에 관한 연구: 협력이론을 중심으로	전성훈	著	5,000원
96-17	남북한 에너지분야 협력방안 연구	박순성	著	4,000원
96-18	북한이탈 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: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	박종철 김영운 이우영	共著	7,000원
96-19	북한의 경제정책 변화와 남북경협 활성화 방안	허문영	著	5,500원
96-20	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완화와 남북한 관계	김규륜	著	3,500원
96-21	북한의 노동정책과 노동력 평가	남궁영	著	5,700원
96-22	한-러 안보협력 방안 연구	강원식	著	8,500원
96-23	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위기수준 평가 및 내구력 전망	김성철 정영태 오승렬	共著	8,500원
96-24	북한체제의 변화주도세력 연구	이교덕	著	4,500원
96-25	북한의 농업정책과 식량문제 연구	최수영	著	4,000원

96-26	북·미관계 개선과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 전망	이현경 著	6,500원
96-27	한·일 안보협력방안 연구	전동진 著	4,500원
96-28	북한의 유일체제와 정책경쟁	안인해 著	5,500원
96-29	韓·中 安保協力方案 研究	崔春欽 著	3,500원
97-01	한반도 통일과정에서 러시아의 역할	강원식 著	5,000원
<b>■ 북한인권백서</b>			
	북한인권백서 1996	옥태환 전현준외 共著 제성호	10,000원
	<i>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1996</i>	옥태환 전현준외 共著 제성호	10,000원
	북한인권백서 1997	김병로 송정호 共著	10,000원
	<i>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1997</i>	김병로 송정호 共著	\$11.95
<b>■ 연례정세보고서</b>			
96	統一環境과 南北韓 關係: 1996~1997		6,000원

■ 학술회의 총서

96-01	북한정세 변화와 주변4국의 대한반도정책	7,000원
96-02	脫冷戰期 韓半島의 戰爭과 平和	9,000원
96-03	북한경제제도의 문제점과 개혁 전망	9,000원
96-04	북한의 대외관계 변화와 남북관계 전망	7,500원
96-05	南北韓關係 現況 및 '97年 情勢 展望	7,000원
96-06	4자회담과 한반도 통일전망	8,500원
97-01	4자회담과 한반도 평화	6,500원
97-02	분단비용과 통일비용	7,500원
97-03	한반도 통일을 향하여: 정책과 국제환경	7,000원

■ 통일문화시리즈

96-01	統一과 北韓 社會文化(上)	14,500원
96-02	統一과 北韓 社會文化(下)	9,500원

■ 논총

統一研究論叢, 제5권 1호 (1996. 6)	15,000원
統一研究論叢, 제5권 2호 (1996.12)	15,500원
統一研究論叢, 제6권 1호 (1997. 7)	14,500원
<i>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, Vol. 5 (1996)</i>	6,500원

## 민족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

민족통일연구원은 통일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제한적으로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에게만 배포해오던 각종 연구결과물들을 보다 폭 넓게 개방하여 전국의 대형서점에서 개별구입하거나 본원의 定期會員에 가입하여 구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
본원의 간행물 분량이 많아 일일이 서점에서 구입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定期會員制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. 정기회원에게는 본원의 모든 간행물(연구보고서, 국문 및 영문 저널, 학술회의 총서, 판매되지 않는 수시 「정세분석보고서」 등)을 직접 우편으로 우송해드리는 것은 물론 학술회의 초청 등 회원의 권리를 부여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.

### 1. 정기회원의 구분

- 1) 일반회원 : 학계나 사회기관에서의 연구종사자
- 2) 학생회원 : 대학 및 대학원생
- 3) 기관회원 :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등의 자료실

### 2. 회원가입 및 재가입

- 1) 가입방법 : 회원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入金證과 함께 본 연구원으로 FAX 혹은 우편으로 보내주시므로써 정기회원 자격이 취득됩니다.
- 2) 연 회 비 : 회원자격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입니다.  
일반회원은 10만원, 학생회원은 7만원, 기관회원은 15만원임.
- 3) 납부방법 : 신한은행 온라인 310-05-006298(예금주:민족통일연구원)
- 4) 재 가 입 : 회원자격 유효기간 만료 1개월전 회비를 재납부하면 됩니다  
(재가입 안내장 발송).

### 3. 정기회원의 혜택

- 1)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등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.
- 2)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「통일연구논총」과 *The Korean Journal of Unification Studies*를 포함하여 그 해에 발행되는 단행본 연구보고서(년평균 25-30권), 학술회의 총서(년평균 5-6권), 정세분석보고서(년평균 10-15권) 등의 간행물이 무료 우송됩니다.
- 3) 본 연구원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,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.

### 4.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

: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-353

민족통일연구원 정보자료실 (전화:901-2586, 901-2613, FAX:901-2547)



---

## 대북 경수로지원사업과 남북한 관계

統一情勢分析 97-07

---

發行處 民族統一研究院

編輯人 民族統一研究院 安保政策研究室

서울 강북구 수유6동 535-353

전화: 901-2526(代), FAX: 901-2547

印刷處 陽東文化社 전화: 266-0892

印刷日 1997년 9월 일

發行日 1997년 9월 일

---